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바란다

2017.11.28.

주최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주관 : 충남연구원

후원 : 지역발전위원회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세미나

일 시 : 2017.11.28.(화) 10:00~12:00

장 소 : 충남연구원 대회의실(4층)

참 석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김재구 박사(전북연구원), 조상필 박사(광주전남연구원), 조주현 박사(경남발전연구원), 김성표 박사(대전세종연구원), 류종현 박사(강원연구원), 오용준 박사(충남연구원), 원광희 박사(충북연구원), 임준홍 박사(충남연구원)

진 행 순 서

- | | | |
|-------------|--------------|---|
| 10:00~10:30 | 기조발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현안 과제- 조상필 박사(광주전남연구원) |
| 10:00~10:40 | 지정토론
(3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정책- 조주현 박사(경남발전연구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 추진 방향- 김재구 박사(전북연구원) |
| 10:40~11:40 | 종합토론
(7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지역불균형 실태와 문제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개선과제• 새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와 방향 제안• 수도권 정책 개선과제 |

목 차

기조발제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지정토론 1

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현안 과제

조상필 박사(광주전남연구원)

지정토론 2

15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역정책

조주현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지정토론 3

23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방향

김재구 박사(전북연구원)

기조발제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지정토론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현안 과제

조상필 박사(광주전남연구원)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실태

■ 인구집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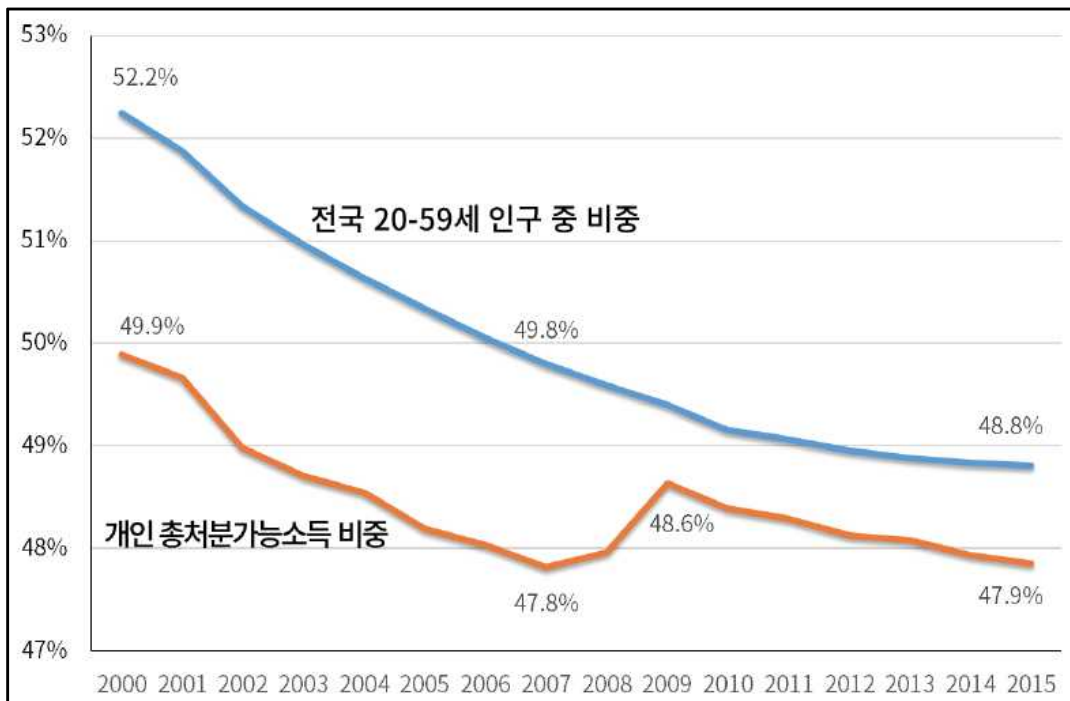
-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1970년 28.3% → 1980년 35.5% → 1990년 42.8% → 2000년 46.3% → 2010년 49.3% → 2016년 49.7% → 2028년 50.2% 전망

■ 지니계수변화

- 전체 16개 시·도 간 : 1985년 0.10 → 1990년 0.09 → 2000년 0.16 → 2010년 0.18 → 2015년 0.16으로 나타나 여전히 시·도간 경제력 격차 나타남.

■ 전국에서 차지하는 지방의 생산인구 및 개인소득 비중

- 지방생산(20~59세) 인구 비중 : 2000년 52.2% → 2007년 49.8% → 2015년 48.8%로 감소
- 개인 총처분가능소득 비중 : 2000년 49.9% → 2015년 47.8%로 감소
⇒ 지방의 현실 크게 개선되지 않아 지금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 필요



<전국에서 차지하는 지방의 생산 인구 및 개인소득 비중 추이>

■ 수출액 현황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출액부문의 격차는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격차 심한편임
- 2000년 3.5배 → 2010년 2.1배 → 2016년 2.8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출액 현황(지역평균)>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도권	25,827	31,063	34,626	37,504	38,298	35,481	50,692	56,788	57,800	63,203	67,991	65,793	62,464
비수도권	7,291	14,710	17,044	19,917	23,278	19,776	24,177	29,604	26,748	26,430	26,335	23,527	22,005
전국	10,767	17,776	20,342	23,218	26,375	22,721	29,149	34,701	32,228	32,920	33,686	30,986	29,145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 비수도권에는 2012년부터 세종시 포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금액」, 각년도

■ 취업자수 현황

- 000년 3.8배 → 2010년 4.3배 → 2016년 4.4배로 증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자수 현황>

(단위: 천명)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도권	3,275	3,712	3,788	3,865	3,905	3,889	3,976	4,068	4,124	4,176	4,280	4,329	4,388
비수도권	871	902	907	911	913	911	915	926	947	965	982	996	1,005
전국	1,322	1,429	1,447	1,465	1,474	1,469	1,489	1,515	1,543	1,567	1,600	1,621	1,6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재정자립도 현황

- 2000년 1.8배 → 2010년 1.9배 → 2016년 1.6배
- 비수도권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재정자립도 보다 낮은 수준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도권	80.4	80.8	79.6	78.4	78.5	80.7	76.3	77.4	77.9	75.9	72.9	71.8	73.0
비수도권	45.0	45.9	44.2	42.9	42.1	40.1	40.4	40.0	40.8	40.4	41.5	42.6	44.6
전국	59.4	56.2	54.4	53.6	53.9	53.6	52.2	51.9	52.3	51.1	50.3	50.6	52.5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각년도

■ 포용성 지수 : 지역 역동성

- 1990년 2.6배 → 2000년 2.4배 → 2010년 2.4배 → 2015년 2.3배 : 2배 이상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포용성 지수 현황>

지 역	1990	2000	2010	2015
수도권	5.28	5.60	5.63	5.39
비수도권	2.04	2.31	2.43	2.49
전국	2.90	3.32	3.51	3.51

■ 연구개발비 현황 : 지역의 경쟁력과 역량

- 2000년 6.8배 → 2010년 7.8배 → 2015년 9.6배 : 격차 더욱 커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십억원)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도권	2,814	5,142	5,780	6,708	7,377	8,103	9,406	10,687	12,410	13,382	14,317	14,790
비수도권	416	671	770	860	951	1,048	1,203	1,371	1,402	1,368	1,485	1,542
전국	866	1,510	1,709	1,956	2,156	2,371	2,741	3,118	3,466	3,488	3,749	3,880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 (각 년도)

■ 연구개발 인력

- 1995년 5.1배 → 2005년 6.4배 → 2010년 6.6배 → 2015년 7.0배 : 격차 더욱 커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구개발 인력>

(단위 : 명)

구 분	199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도권	23,920	66,590	73,783	85,054	88,233	93,363	100,339	106,171	114,906	116,435	122,915	124,139
비수도권	4,706	10,435	11,111	12,799	13,195	14,364	15,316	16,355	16,760	15,716	16,919	17,678
전국	8,554	20,964	22,862	26,347	27,264	29,177	31,258	33,196	35,163	33,490	35,624	36,465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년도)

■ 특허등록건수 :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기술의 창의성, 기술혁신 역량

○ 1995년 16.1배 → 2005년 13.6배 → 2010년 8.8배 → 2015년 8.0배 : 점차 감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허등록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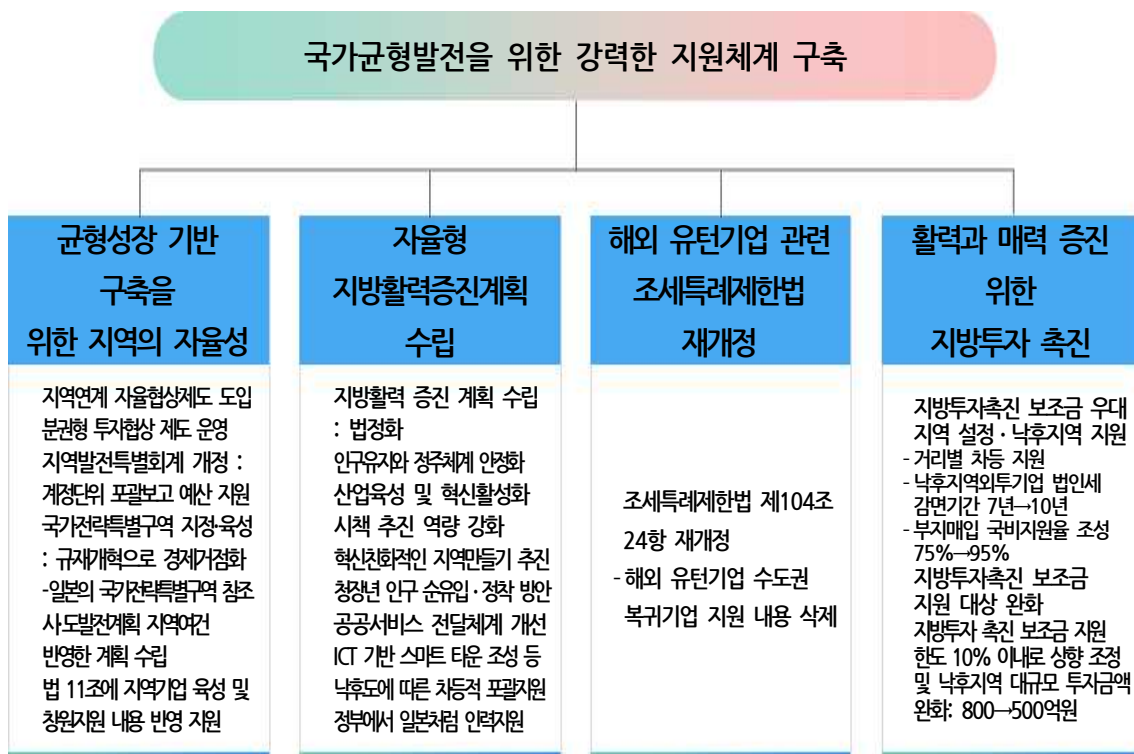
(단위 : 건)

구 분	199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도권	1,754	13,450	23,111	22,827	14,198	9,250	11,409	15,835	18,015	20,135	20,314	16,090	17,258
비수도권	109	991	1,520	1,767	1,408	1,095	1,299	1,882	2,117	2,483	2,556	1,966	2,170
전국	387	3,327	5,568	5,716	3,806	2,624	3,195	4,499	4,922	5,598	5,690	4,458	4,832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 년도)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과제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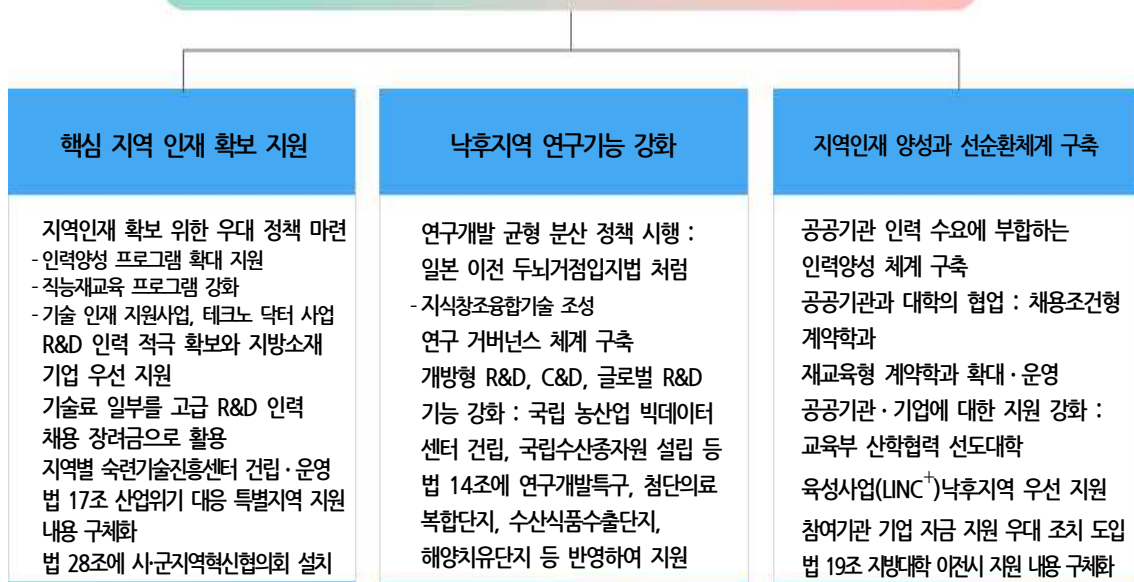
■ 활력있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혁신과 지역역량 강화

활력있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혁신과 지역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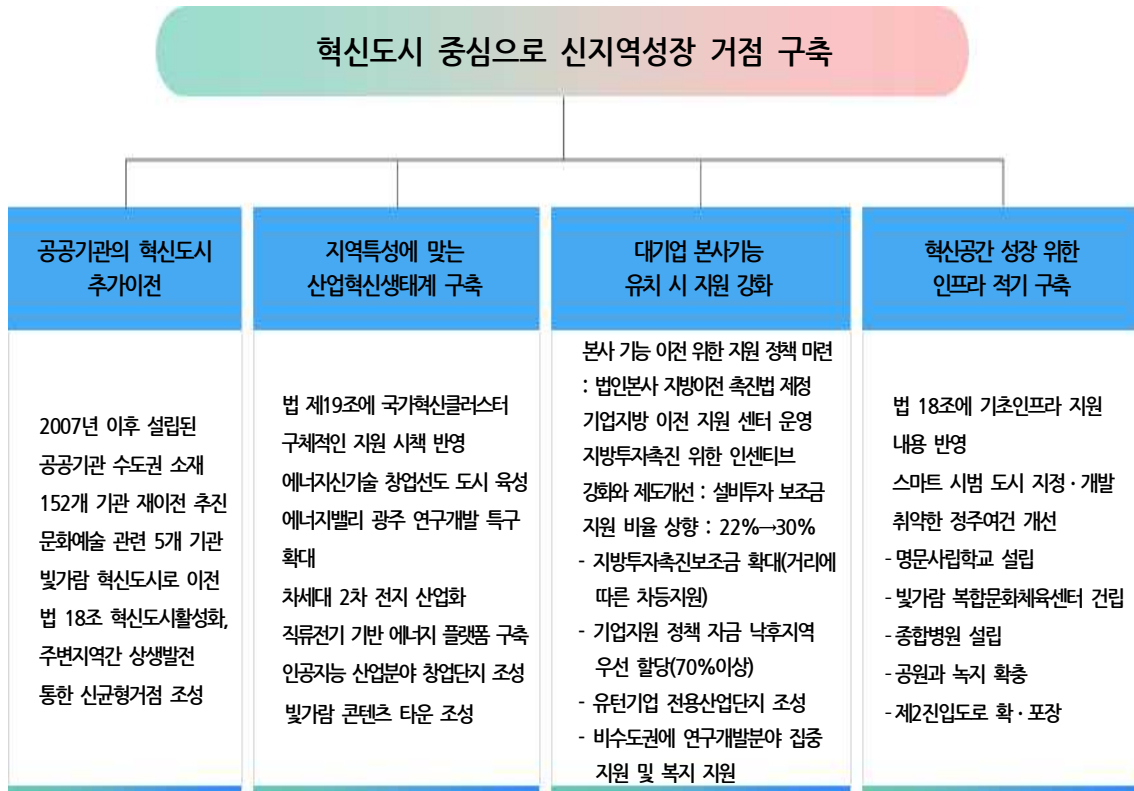


■ 지역혁신주체의 연계와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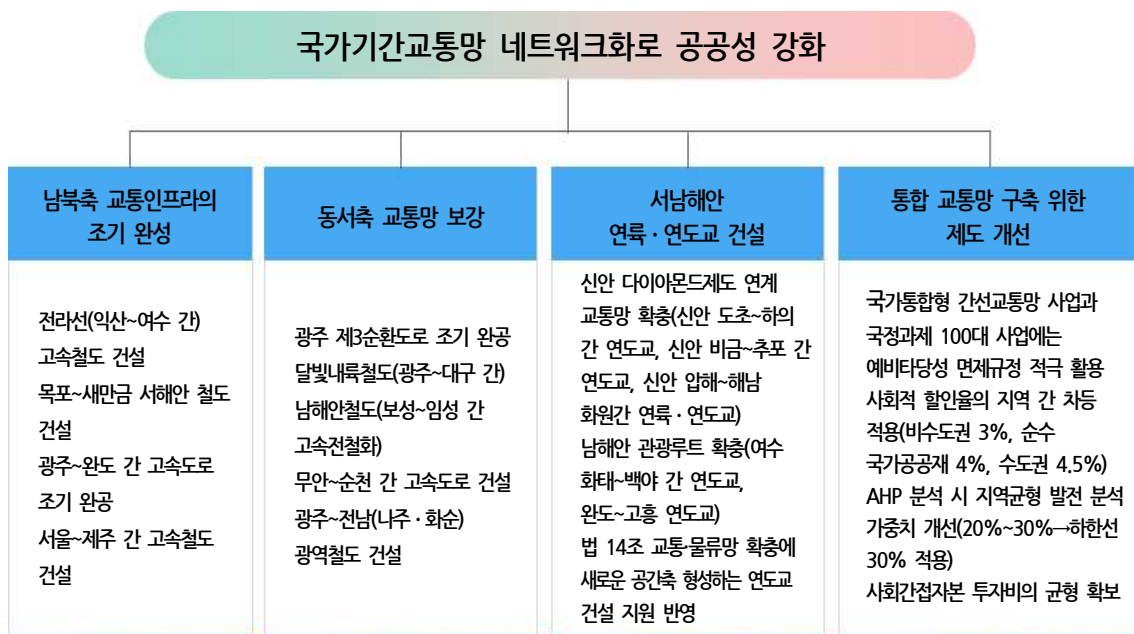
지역혁신주체의 연계와 통합



■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 국가기간교통망 네트워크화로 공공성 강화



메모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지정토론2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정책

조주현 박사(경남발전연구원)

1.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정책

1) 자치분권과 관련된 지역정책

■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현실화

- 제2국무회의 시범운영 후 제도화 추진과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자치권 보장과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
- 2018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포함한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적 제정
-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폐지청구 요건 세부화 등을 추진하여 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
- 주민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과 주민자치회 제도개선안 마련 및 법률 개정으로 마을자치 활성화

■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지방간 기능재조정, 지방세 새로운 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15%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수준으로 개선하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지역발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를 통해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 강화, 지방세의 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국민감시단 활성화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제고,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모집과 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으로 고향사랑기부제법(가칭) 제정을 통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 지자체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 및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으로 교육민주주의 회복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 및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와 유치원 포함 초·중고 학교 학부모회 지원 확대

■ 세종특별자치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 행자부·미래부 등 세종시 추가 이전, 국회분원 설치 및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으로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확대
-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지방 이양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분권과제 특별자치 모델로 설정

2)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지역정책

■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 및 위상 강화를 통해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책임성 강화
-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및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
- 기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조성
- 도심재생과 연계한 창업·혁신, 문화·복지공간까지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

■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하여 정비가 시급한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 및 지원
- 지역 중심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지역전문가 등 추진 체계 역량 지원 강화
-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 등 소형 주택 에너지 성능을 패시브 수준으로 강화하여 주거취약계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 및 공사 발족으로 해운 선사에 대해 원스톱 지원
- 외항선박에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 지급하며,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하는 해운·조선 상생 협력
-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여 비상시 화물운송체계를 구축하며, 선·화주 상생으로 국적선사 이용비율 확대
- 해양클러스터 지정 및 인프라 구축으로 물류망 확충

3) 농산어촌 발전과 관련한 지역정책

■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농지연금 신규 상품 도입, 여성 농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등을 통해 농산어촌의 기초적인 생활여건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개편, 우수 관광자원 선정,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목재산업단지 조성,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 및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산림 일자리·복지 확대

■ 농어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

-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농산물의 의무자조금 조성 및 생산안정제 확대
-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 도입 등 공익형 직불제 개편
-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는 품목의 +복구지원 단가 인상,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 확대,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개발 및 보급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으로 영농창업 활성화
-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을 통한 환경친화형 축산물 확대
- 스마트팜 시설원예와 축산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을립하여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식품 시범사업, 유기 이력·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및 GAP·HACCP 인증농가 확대,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 제정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

■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 휴어제, 어구관리법 제정,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 등으로 우리 바다 되살리기
-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 수립 및 스마트 양식 구축으로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도입 및 HACCP 등록 확대
-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해안의 공간계획 수립으로 국토해양 통합관리

2. 검토 의견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서로 보완적인가?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정부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
- 지방분권은 정치 시스템 개편이고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정책의 목표라고 하는 가치체계로 별개의 영역으로 지방분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
- 지방분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낙후지역의 가용자원 확보, 낙후지역의 정책 입안 및 수행이 중앙정부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지역별 효율성), 낙후지역의 정책 입안 및 수행이 지역의 발전지역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지역간 형평성)
-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인세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징수되는데 현재의 조세·재정 시스템 하에서는 낙후지역의 자주자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또한 법인세 납부 중소기업의 약 58%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중소기업들에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가?

■ 국가균형발전 지역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은?

- 도심재생 뉴딜사업의 대상 지역의 선정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몰릴 가능성이 높음
- 큰 규모의 미래 수요, 공급자(설계, 시공, 감리) 확보 및 규모의 경제 달성 용이, 공적 자원 투입의 수도권 편중이 민간자본 유입(젠트리피케이션)과 상승 작용으로 높은 사업 효과성, 높은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으로 수도권이 유리

■ 지역정책의 정합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지방분권은 정치 시스템 개편이고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정책의 목표라고 하는 가치체계로 별개의 영역으로 지방분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어 지방분권 개편 후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

-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체계와 균형발전 역점 사업 간에 정합성이 부족하여 관련 시책과 사업들을 지역 및 장소를 기반으로 재분류, 통합, 체계화

메모

[illegible]

지정토론3

국가균형발전 추진 방향

김재구 박사(전북연구원)

1. 국가균형발전을 정책 최우선 원칙으로 적용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조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있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국가균형발전 보다는 지방분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정책적 논리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만을 놓고 보았을 때, 지방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중 하나이며, 지방분권이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특히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전북(재정자립도 28,6%)과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에는 오히려 지역발전에 있어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분권이 추구하는 자치발전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자치단체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원칙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있어 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을 때 크게 혜택을 보는 지역은 역시 수도권일 것이다. 이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지역정책이 지역경쟁력 등 지역발전에 중심으로 두고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인구, 재정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역여건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 특히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의 강화는 지역경제,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의 차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지방분권으로 인해 지역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기조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서 절대 원칙으로 작동하여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개헌 과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하고 헌법에 명문화가 필요하다.

2. 과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를 통한 정책 보완 및 강화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속에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정책은 지역의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목적으로 추진한 기업도시는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남아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민간기업 투자활성화라는 크게 두 가지 정책 수단에 있어 지방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측면에서는 또 다른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2.0을 추진하는데 있어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의 투자여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결정, 관광객 유입 등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방에 대한 SOC 등 산업 및 정주여건 관련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불균형 요인을 우선 해소해야 하며, 규제 샌드박스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도적 측면에서의 투자여건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정책 지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

정립과 낙후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 및 법안 개정 등을 필요하다. 특히 낙후된 지역이 자생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부터 마련하자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일부 지방은 지방소멸 등의 위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지역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인구 유지도 벅찬 과제이고, 이러한 문제는 향후 지역 국회의원 수 감소로 지역 간의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간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 선정과 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지역발전등급제를 통한 차등 지원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구조기금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기 위해 일찍부터 지역발전등급제를 시행하였으며, 개별국가별로도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가균형발전영향평가를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정책수요가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사항에 대하여 비수도권과의 정책조정을 통해 사전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4. 수도권규제완화 지속 또는 강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생활환경 등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지방의 공동화를 막고 수도권의 신규기업의 입지 요건 등을 강화해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이나 기관을 지방으로 유도해 국가 균형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산업의 위축을 초래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행정복합도시 개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국토균형발전의 효과가 소멸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를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 역시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효과를 높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발전과 함께 비수도권의 지역혁신과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규제의 지속 또는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권규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수도권 규제 및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는 별도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도 거치도록 하거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통합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메모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